'좌파 똬리' 국정원 해체 후 재창설 하자

한반도 테라포밍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
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보요원은 영국 비밀정보국인 엠아이식스(MI6) 소속의 암호명 007로 불리는 '제임스 본드'다.

그는 실존 인물이 아닌 소설가 이언 플레밍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로 2차 세계 대전을 거친 해군 중령으로서 종전 후 MI6로 소속을 변경한 이래 KGB로 대변되는 공산권 국가들과의 정보작전을 수행하던 최고의 요원으로 알려져 있다.

대중이 원하는 최고 정보요원은 제임스 본드처럼 훤칠한 외모와 명철한 사고, 뛰어난 싸움 실력을 갖춘 모습일 것이다. 이러한 설정의 배경은 MI6에 근무했던 작가 이언 플레밍 자신이 MI6 동료들을 세심히 관찰하고 그들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각색한 것이며 그 결과 제임스 본드 외 엠(M)과 큐(Q)라는 인물이 탄생했다.

본드가 최고의 정보요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그가 이튼스쿨과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인재며 해군 중령 출신이라는 점도 있으나,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그가 '고아'였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가 목숨을 잃어도 슬퍼할 가족이 없었으며 그 역시 보살필 사람이 없기에 사사로운 일보다는 국가를 위해 작전마다 목숨을 걸고 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현실 속 정보기관과 정보요원의 모습은 어떨까? 영국 MI6 사례의 경우 캠브리지대를 졸업한 수재들임에도 KGB에 포섭된 이후 영국 MI6에 입사해 이중간첩 활동을 하다 적발된 '캠브리지 스파이 5인조(Cambridge Spy Ring) 사건'이 매우 유명한 일화다.

하지만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현실은 영국의 사례를 넘어설 만큼 좌익사상을 가진 직원들이 국민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현재 우리 국정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간 채용된 직원들이 3~5급의 중간 간부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박지원과 서훈이 국정원장으로 재임했고, 미국 문화원 방화범인 '용공분자 박선원'이 직원 채용 및 교육을 맡고 있다. 여기에 정보예산을 관리하던 기조실장,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5년간 무슨 일이 있었을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할 지경이다.

또한 김대중 정부 시절 2차에 걸쳐 국정원 엘리트 직원을 모두 퇴직시켜 대북 공작망이 완전히 붕괴되는 뼈아픈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을 겪은 '직장인' 국정원 직원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의명분보다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남을 수 있는지에 집중하게 된다.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내부공작(파벌 만들기)과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좌익사상을 가진 조직적 반역 행위는 선을 넘은 지 이미 오래다.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넘어가도록 아직 국정원 인사조차 끝내지 못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현재 인적 구성으로는 개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무엇보다도 국정원에 대한 '강력하고 대대적인 정화작업'이 요구된다.

물론 반대론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정부는 했었는데 이번 정부는 왜 못할까? 북한을 옹호하고 주사파들에 충성한 부역자들을 모두 척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정보기관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다만 이 모든 행위의 근간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국정원 해체 후 새로운 정보기관 창설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인적 혁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심각히 고려해 현 국정원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을 창설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에 숨어있던 불순분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솎아내야 한다.

그 이전에 우선 실천적 과제로 '고향·학교·동기 모임' 등을 전면 금지하고 특정 지역 출신자들의 내부 결속 및 대외 접선 실태를 철저히 감찰하는 한편, 전 직원 대상 사상 검증 및 직무능력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 세밀한 직무기술서 검토를 통해 역무역량 미달자 및 잠재적 반역자들을 선별해내야 한다.

또한 군 장교단과 마찬가지로 필수 격오지 근무 포함 순환보직을 전면 시행해 '고인물'을 청산함과 동시에 국방부나 법무부처럼 국정원 출신을 국정원장에 보임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강력하고 대대적인 정화작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직원 대상 사상검증·직무능력 평가 후 해임 대상 선별
선진 정보기관 재설립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자유 대한민국의 안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오직 서울 강남의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로 구성된 정보기관은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방 근무를 기피하고 강남3구에 거주하며 중상층의 삶을 영위하는 데 익숙한 그들의 삶 속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제임스 본드와 같은 정보요원을 결코 만날 수는 없다.

오직 국가를 위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북한 정권 몰락을 주도함과 동시에 중국의 야욕을 분쇄하고 한반도를 지켜낼,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전선에서 24시간 365일 '소리없는 전쟁'을 수행할 결의에 찬 '전사(戰士)'로 구성된 새로운 정보기관과 정보요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스카이&땅 '내선남뇌'

우리나라에서는 떡이나 사먹으라며 건네 '떡값', 영국에서는 집에 가다가 모자나 사서 쓰라며 건네 '해트(hat:모자)'라고 불리는 뇌물은 늘 사회·정치·경제적 문젯거리다. 뇌물의 사전적 의미는 '직권을 이용해 특별한 편의를 보아달라는 뜻으로 제공하는 금품'이다. 미국 판사 출신 '뇌물의 역사' 저자 존 누난은 "뇌물인지 선물인지 판단하는 것은 보답에 대한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압박의 정도"라고 했다.

다음은 선물과 뇌물을 구별하는 몇 가지 기준이다. '선물은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고, 뇌물은 남에게 감추고 싶은 것이다' '힘 있는 현직 때 주면 뇌물이고, 직을 떠난 뒤 주면 선물이다' '선물을 받으면 잠을 잘 이루지만, 뇌물을 받으면 잠을 잘 못 잔다' '선물은 공개적으로 주고, 뇌물은 은밀하게 준다.' 가장 압권은 '내가 주면 선물이고, 남이 주면 뇌물이다(내선남뇌)'는 정의다.

각 나라는 액수로 뇌물과 선물을 구별하기도 한다. 미국은 1회 20달러(약 2만6000원)·연간 50달러(약 6만5000원)로 정해 놓고 공직자와 공무수행 민간인이 이를 위반하면 최대 15년 징역형, 25만 달러(약 3억24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국은 25파운드(약 4만2000원), 일본은 5000엔(약 4만6000원)을 넘으면 뇌물로 규정한다. 캐나다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혜택을 모두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부패행위조사국(CPIB)이 부정청탁 혐의자를 채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부터 시행되지만 흐지부지하다. 여전히 공직자 뇌물 사건은 끊임없다. 특히 장관·판사·검사 등 고위공직자 출신의 '전관예우' 같은 악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기업에서 냉면 한 그릇 얻어먹었다고 부패 공무원으로 낙인찍으면서도 억대 뇌물을 받은 유력 정치인들은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 나간다.

사실, 선물과 뇌물은 구별하기 어렵다. 해외 출장을 다녀온 직원이 양주 한 병을 선물로 내 놓은 것도, 그게 나중에 인사나 연봉에 반영되면 뇌물이 된다. 따라서 공직에 있는 사람은 아예 선물도 사양하는 게 상책이다. 선물(膳物)이 졸지에 오물(汚物)·악물(惡物)이 되지 않게 하려면 선물(善物)에 족해야 한다.

조정진 편집인

대한상의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 낮추라"

어느 나라든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재정과 통화정책이다. 재정 가운데 세금은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확산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각국의 세금 인하가 줄을 잇는다.

경기 진작을 위한 세제 개편 대상 중 상속세율 인하를 빼놓을 수 없다.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가업 승계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게다가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 시 평가액의 20%를 할증 과세해 60%를 적용함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

대부분 국가는 상속세를 부과하더라도 세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주요국의 상속세율은 일본(55%)·미국(40%)·독일(30%)·네덜란드(20%)·덴마크(15%)·이탈리아(4%)이며 OECD 평균은 27.1%이다.

OECD 평균은 27%… 한국은 60%로 초고율
국제기준 벗어난 상속세에 세대교체 어려움
경제 활성화는 세금 부담 덜고 규제 풀어야

지금처럼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예컨대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의 지분은 40%만 남게 되고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이 16%로 줄어든다. "모든 세원이 투명한 지금 시대에 높은 상속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기업 경영진들의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현실에서 경제계가 기업승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을 정부 및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계는 그간 우리나라 상속세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삼성의 경우 이건희 선대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상속세는 12조 원대다.

주목되는 바는 상의가 건의문에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을 담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OECD 주요국 사례에 비춰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고, 지난해 일부 개선됐으나 적용대상이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정돼 활용도는 낮다는 지적을 받은 지 오래다.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13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는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상속된 재산의 가치증식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자본이득과세'로 상속세를 대체 과세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기업 상속에 가장 가혹하다. 사실 경영권 승계는 '사적자치(私的自治)' 영역으로 제3자가 관여할 이유는 없다. 상속세율 인하를 재벌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음모로 여기면 선택지를 스스로 좁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부동산과 주식 등을 상속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지 않고 생산과정에 다시 투입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는 마땅히 이연돼야 한다. 상속과세의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도 상속세 완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을 단행해 기업 경영의 숨통을 트이고, 고용 창출 등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길 당부한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활동을 돕는 길은 명확하다.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

근거 없는 사드 괴담 퍼뜨린 세력 처벌하자

경북 성주의 사드(THAAD)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드는 원래 6개월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조기 배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1년 이상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방침을 바꾸더니 5년 내내 정식 배치를 뭉갰다. 작년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대북 미사일 보호망은 지금까지도 구멍 뚫린 채였을 것이다.

사드 기지의 정상운영을 위한 마지막 절차였던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났다. 사드는 2017년 4월 이후 전자파 논란으로 야전 배치 상태로 운용돼 왔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의 최대치는 휴대전화 기지국 전자파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사드 기지 전자파의 최대값은 0.018870W/㎡였다.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이다. 과학적으로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성주 전자파 괴담' 근거 없는 음모로 결론
환경영향평가결과 기준의 530분의 1 불과
이제라도 좌파의 정치 괴담엔 책임 물어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는 북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최후의 수단이다. 역대 주한미군사령관들이 한국 배치를 본국에 강력 요청했고 2016년 우리 정부가 동의했다. 그러나 2017년 이래 인체유해 전자파 괴담 때문에 지지부진했다.

좌파단체 등은 사드 레이더를 가동하면 부대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에 노출돼 건강에 치명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드가 성주 참외에 피해를 준다는 괴담도 무분별하게 유포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해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찢어질 것 같아" 등 선정적 노래를 부르며 괴담 확산에 앞장섰다.

중국도 노골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보복을 가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괴롭히고 쫓아냈다. 한국 문화계 활동과 관광까지 틀어막은 '한한령'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상주 사드 기지의 비정상이 6년이나 지속된 가장 큰 이유는 문 정부에 있다. 당초 예정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 방침을 택했는데, 이 경우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 협의까지 이뤄내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 말년엔 '해가 없다'는 평가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류는 윤석열정부 들어서야 달라졌다. 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기지 정상화' 원칙을 천명하며 차일피일 미뤄졌던 환경영향평가, 2차부지 공여 등에서 속도를 냈다. 중국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전략서를 통해 "사드 문제는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선언했다. 성주군 참외 농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난해 총매출액이 참외 시설재배에 성공한 이후 52년 만의 최고인 5700억 원을 넘어서면서 괴담도 빛을 잃기 시작했다.

종교·시민단체는 천성산 도롱뇽·강정마을 맹꽁이를 지킨다며 KTX 터널 공사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막았지만 공사가 끝난 지금도 도롱뇽과 맹꽁이는 건재하다. 광우병에 걸린 국민도 없고 미국산 쇠고기는 판매 1위다. 성주 참외도 사드 전자파에 튀겨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전력투구하는 일본 후쿠시마 괴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과를 안 한다.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근거 없고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그래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괴담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드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다. 사드는 북한 공격에서 우리 생명을 지켜줄 거의 유일한 무기다. 주권 국가는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 중국이 항의하고 있지만 사드 배치에는 어떤 외국도 개입 못 한다. 국가 주권의 핵심은 영토 보전과 국민 안전이며 사드 배치는 명백히 국가 주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